# 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대의 지켜야"

## 靑 수보회의 모두발언서

### "30년간 피해자·활동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한 결과 세계사적 운동 자리매김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어"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연 논란과 관련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의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온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며 "위안부 운동은 인간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성장해온 운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은 스스로 여성 인권운동가가 돼 세계 곳곳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며 "시민 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연대했고, 시민들도 다같이 힘을 보탰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수요집회에 참여했고 위안부 문제를 숨겨진 과거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안고 있는 정의연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운동은 시민의식과 함께 발전했다"며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시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피해자 할머니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반인류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운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피해자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역사적 진실이 숨김없이 밝혀지고 기록되어 자라나는 세대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기록으로 새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연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성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시민단체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20대서 폐기된 '국립공공의대법' 대표 발의

## 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으며,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라며,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금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도의회, 올해 첫 정례회 개회

## 9일부터 24일까지…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0일부터 2일간 10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청과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는 나기학 의원이 발의한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국가 균형 발전 역행하는 유턴 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김정수(익산2), 조동용(군산3), 최영규(익산4), 문승우(군산4), 이명연(전주11)의원이 1일차에, 박용근(장수), 이병철(전주5), 최영심(비례), 김대오(익산1), 진형석(비례) 의원이 2일차에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송성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전북의 가계와 기업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되고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 동부권 우박피해 지원책 마련을"

## 황의탁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무주) 위원장은 8일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 실장에게 무주, 남원, 장수 등 전북도 동부지역의 우박피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7일 이보상 과수협회 회장, 지역 군의원 등과 함께 가장 큰 우박피해를 본 무주군 지역의 사과 과수원 및 복숭아밭 등 우박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6일 무주, 남원, 장수 지역에 지름 0.5~2㎝ 크기 우박이 10여분간 쏟아져 모두 602개 농가, 334.7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주지역의 경우 410개 농가 229.7ha에서 사과, 고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우박,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 등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경감과 재해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의탁 위원장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로 농업인의 손해가 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 농산유통과 등 관계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해양수산 정책개발 방안 토의

## 국주영은 도의원,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전주9)은 8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해양수산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와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문승우·홍성임·김이재 의원,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최영심·나기학·황영석 의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 김미정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과 및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창환 교수의 기조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과 해양수산 분야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오 교수의 설명을 듣고, 해양수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새만금해양수산국'의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유호상 기자

# 여야, 상임위원 정수 先조정 합의… 10일 처리

## 민주 6·통합 4·비교섭 1인 비교섭몫은 국회의장 추천

여야는 8일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수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선(先) 정수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원구성도 법정시한인 이날이 아닌 10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은 합의됐다. 박 의장과 민주당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배분됐다. 비교섭단체몫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때아닌 우박에… 도, 602농가 334ha 피해 접수

## 전북 동부권에 집중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지난 6일 쏟아진 우박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조금씩 집계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 20여분 동안 쏟아진 우박으로 602농가, 334.7ha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우박피해는 남원과 무주, 장수 등 동부권에 집중됐다. 피해면적은 남원 55ha와 무주 229.7ha, 장수 50ha 등에 달했다. 농작물별로는 사과 131.5ha와 복숭아 15ha, 고추 및 기타 188.2ha로 파악됐다.

사과의 경우 열매솎기를 끝낸 상황에서 골프 공만하게 열린 사과들이 우박에 맞아 떨어지거나 상품가치를 잃었다. 어린 가지들이 다수 찢어지는 등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고추 역시 우박으로 어린 가지들이 찢겨나가는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우박이 쏟아져 안성면과 무풍면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과 등 과수 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피해뿐 아니라 사과나무의 경우 2년생부터 열매가 열리는데 어린가지들이 많이 찢어져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와 시군은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6일까지 피해접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피해접수 후 복구계획과 현장 확인 등 거쳐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일반작물의 경우 ㎡당 59원, 대파대는 일반작물의 경우 ㎡당 304원이 지원된다. /유호상 기자

# 도,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개선·추진

##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수혜자 입장에서 개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철 식사준비로 인한 근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급식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 시행 이후 꾸준히 대상 마을을 늘려 올해는 630개의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공동급식 장소인 마을회관,경로당 등이 폐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는 시군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 빠르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혜자인 마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마을회관, 경로당이 개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락 배달이나 주변 식당 이용 등 급식 방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시달했고, 시군별 공동급식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바쁜 영농철 급식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미세먼지 무게측정 로봇 시스템 운영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2020년 6월부터 도내 분석기관 최초로 '미세먼지 무게측정 로봇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봇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등가성평가와 미세먼지 성분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측정법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 더욱 정확한 방법은 수동측정법으로, 미세먼지를 직접 여지에 채취하여 무게를 측정하는국가기준측정방법이다.

하지만 수동측정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볼 수 없어 미세먼지 예경보제에서는 그에 준하는 자동측정법을 적용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동측정법과 비교하여 측정기를 교정하는 '등가성평가'를 시행한다.

등가성평가와 성분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세먼지 무게는 온도, 습도, 정전기 등 작업 환경에 민감하여 측정에 어려움이 발생, 로봇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온·습도 등 측정환경을 일률적으로 제어하고 진동 및 정전기 방지 등 무게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해 100만 분의 1g의 미세먼지 무게 차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정밀한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하게 됐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내 산란계농장 계란 안전정 집중검사 8월까지 실시

전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대비,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전 산란계 농장(154호)에 대한 계란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던 친환경 인증농장(37호)도 검사를 일원화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비펜트린 등 살충제 34종과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80종 및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3종)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출하를 중지,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을 회수 폐기,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살충제 불법사용 등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